

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

강 인 덕*

1. 통일환경의 변화

- 냉전체제의 붕괴이후, 세계는 평화, 다원적 민주주의, 시장경제원리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
 - 「평화」, 「환경」, 「기아」 등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증대, 상호의존성이 심화
- 「홍콩의 중국 반환」, 「신미일안보전략 수립」 등, 한반도 주변정세도 급격한 변화를 거듭
 - 주변 4강간 「전략적 파트너십」 관계 수립
-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 시장의 몰락과 북한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
 - 체제생존 차원에서 미·일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
- 북한의 「핵문제」, 「식량난」 등을 계기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추세 심화
 -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

⇒ 우리의 성숙된 역량을 바탕으로,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민족적 과제로 대두

2. 새정부 대북정책 방향

가. 목 표 : 「평화·화해·협력」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

- 나. 3대 원칙 :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
② 흡수통일 배제
③ 화해·협력 적극 추진

* 통일부 장관

다. 정책방향

- 당장의 통일 보다, 「실사구시」적 차원에서 우선 「평화공존」관계 정착에 역점
 - 평화와 안정의 토대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해 가면서, 통일을 지향
- 당국간 대화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가동에 주력
 - 평화정착 위한 4자회담과 기본합의서 이행 위한 남북대화 병행추진
 -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위해 노력
- 포용적 입장에서 북한의 변화노력을 지원
 - 보다 많은 「접촉」·「대화」·「협력」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-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

라.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

- 새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점차 높혀 가면서도, 「관망, 기대」도 표출
 -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, 「정경분리」원칙에 관심 표명

* 「민족대단결 5대방침」 발표(4. 20)

- ① 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
- ②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민족 단결(계급·계층을 초월, 통일 위해 단결, 투쟁)
- ③ 북과 남 사이 관계개선(사상과 제도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공존·공영·공리 도모)
- ④ 외세·반통일세력 반대(반통일적 법률·기구 철폐, 정치적 장벽 제거)
- ⑤ 북과 남, 해외동포 연대·연합(쌍무·다무협상 개최)

- 「김정일 시대」북한의 대남정책 골격
 - 새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맞대응 성격
 - 기본적으로 「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」등 기존 통일노선 유지
 - 특히 ②, ④, ⑤ 항은 전형적 통일전선전술

3. 남북간 주요현안 및 대처방향

가.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

-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

의 正道이자 지름길

〈북경 「남북당국 대표회담」 결과〉 (4. 11~17)

- 우리측은 상호주의에 입각, 「이산가족면회소」 설치문제와 「비료지원」 문제가 병행함의 되어야 함을 강조
 - 그러나 북한측이 「정경분리」 원칙을 왜곡하면서, 「선 비료지원, 후 상호관심사 논의」 입장을 고집, 가시적 성과없이 회담종료
- 이번 회담은 남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마련된 후 첫 남북당국간 대화라는데 의미
 - 북한으로 하여금 새정부의 대북정책을 충분히 인식케함으로써, 남북관계의 새 틀을 정립해 가는 계기
- 정부는 앞으로도 의연한 입장에서 인내심을 갖고 남북당국간 대화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노력
 -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상응한 태도변화를 요구해 나갈 생각

〈「정경분리」 원칙의 의미〉

-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「시장경제」 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속적·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
 - 정부는 규제완화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면서, 과당경쟁 등 부작용 방지
- 「정부차원」의 대북지원과 협력에는 적용 불가
 -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,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필요

〈「상호주의」의 의미〉

- 「상호주의」는 「실사구시」적 대북정책의 당연한 귀결
 - 비록 대등하지는 않더라도, 북한도 우리측의 노력에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이려는 것
 -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
- ※ 북경 남북당국 대표회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%가 「상호주의」 원칙을 지지

나. 이산가족문제 해결

- 이산가족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
 -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해결의 시급성 증대
 - * 과거 고향방문을 신청한 이산1세대 중 30% 이상이 사망
- 정부는 이산가족 고향방문, 생사확인, 상봉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
 - 이산가족면회소·우편물 교환소 설치·운영 및 고령 이산가족 개별방문 허용 등 실현에 주력
 - 남북적십자회담 개최
- 또한 이산가족 교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
 - 4. 1부터 영세이산가족에 대한 교류경비 지원 실시
 -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추진
 - 「남북 이산가족교류 민간협의회」를 결성(5. 28)
 - 본격적인 상봉과 교류에 대비, 「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」설치 준비

다. 대북지원

-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
 - WFP 제4차 대북지원에 동참, 옥수수기준 5만톤 규모의 식량지원 입장발표(3. 9)
 -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(3. 18)
 - 민간단체대표의 지원, 분배결과 확인목적 방북허용
 - 모금행사 개최, 언론사·기업체 협찬·후원방식 참여허용
 - 식료품공장, 합영농장 등 협력사업방식 지원 허용
 - 남북적십자 대표접촉(북경, 3. 25~27)에서 합의한 민간차원의 제3차 대북지원물품도 전달 완료(5. 30)
 - * 밀가루 1만5천톤, 비료 1천톤, 쌀 57톤 등 국내산 물품 위주(94억여원 상당)
- 북한당국의 전용 등 가능성을 방지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
 - 국제기구, 국제NGO 등과 긴밀히 협조,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분배투명성 보장에 역점
-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협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

라. 남북 경제협력

-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노력을 지원하고,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전인차
 - 상호 이익과 민족복리 도모

- 남북교역은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고환율·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'97. 11이후 침체국면
 - 올해 1/4분기 교역규모는 3천3백4십1만4천 달러로, 지난해 동기의 57% 수준(4월중 교역은 68.8% 감소)
 - 협력사업도 다수기업이 투자계획 유보 또는 투자시기 조정

- 정부는 앞으로도 「정경분리」에 입각, 꾸준히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
 - 지난달 30일, 경제협력 활성화조치 발표
 - 방북요건 구비시 승인 원칙화 등
 - 수시방북제도 확대
 - 「포괄적 승인품목」 확대
 - 투자규모 제한 폐지
 - 교역규제품목 최소화(Negative List화)

마. 대북 경수로지원

- 대북 경수로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
 - 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틀 유지
 - ② 최초의 대규모 남북한 협력사업
 - ③ 민족의 공동발전을 도모
 - ④ 한국형 원자로의 국제적 광고효과 등

- 부지준비공사 착공식('97. 8. 19) 이후,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남북한 근로자 250여명(북한측 100명)이 공동작업을 진행중
 - 6. 3 현재 초기공사 물량의 90% 정도 진척

- 개략사업비 확정('97. 11, 51억 7천8백만달러)후 총 5차례 경수로비용 분담문제 협상 진행
 - 「국내경제 사정」과 「경수로사업에서의 중심적 역할 확보」라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협상
 - * 10년이상 나누어 지출되며, 우리측 부담분이 대부분 원화 기여분으로 한전을 통해 다시 국내경제로 환류됨을 고려할 필요

4. 남북관계 향후 전망

- 북경 남북당국 대표접촉 결과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앞으로도 3대원칙에 입각, 「실사구시」적 차원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
 -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가 필수적
- 그러나 당국간 대화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
 - 향후 남북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북한의 선택과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
- 아직 북한의 특별한 변화조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
 - 일단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내부정치 작업과 미·일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인상
- 그러나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, 북한의 변화는 시간문제
 - 북한 스스로도 체제의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
- 북한은 최근 김일성 사망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(제10기)를 오는 7. 26 실시한다고 발표(5. 20)
 - 북한체제를 정상화해 가려는 수순으로 해석
 - 공식으로 있는 주요 자리들도 채워질 가능성
- 이번 과정이 북한체제는 물론,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